

비용 지출 제한...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출장' 근절될까

행안부 '국외출장규칙표준' 개정 권고...정보 공개 확대 의원 참여 대폭 축소 통해 심사위원회 독립성도 강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부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이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엔 의결서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 기간, 직위 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 계획변경 시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해외 출장 이후 사후 관리 역시 강화된다. 그동안은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키로 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3분의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외 출장 시 예산 집행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항공·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이 금지된다. 또 국외 출장 시에는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는 한편,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국외출장 규칙 개정은 최근 3년간 국외출장을 떠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지급된 예산으로 화투·술을 구입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지방의



퇴임 통장 노고 격려 광주 동구는 13일 청사 접견실에서 퇴임 통장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구정 발전에 헌신해 온 퇴임 통장 6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광주동구 제공>

회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과다 지급, 예비 허위 청구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에

서도 유사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 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

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 정치권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제정"

姜시장, 여야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 지원" 당부 시의회 "경제·의료 지원·자조공간 등 포함" 촉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국회를 찾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권영진 국회 제주항공여객기참사특위 위원장과 신정훈 행안위원장, 김재원 의원을 잇따라 만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특위 위원장은 "특위에서 현장조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종합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특별법에 유가족과 광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행안위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촉구키로 했다.

강 시장은 김재원 의원과 만나 유족과 의논해 진상조사 이후 추모음악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의료 지원, 유가족을 포함한 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자조공간(가칭 1229마음센터) 마련,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담

을 계획이다.

친권자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해 성년까지 지원하고 유가족 등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포함한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11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심리·경제적 타격을 입은 모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력키로 했다.

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수습지원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참사 공식 애도 기간이 지났고 희생자들이 속속 가족 품으로 돌아와 장례 절차가 끝났다"며 "이제 유가족과 피해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습지원단은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확실한 권리 보장, 심리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원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습지원단은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은진기자

전남 먼섬 25곳 주민 체감형 정책 만든다

道, 접근성·생활인구 유입 등 5개년 계획 수립키로

전남도가 오는 17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문도, 동거차도, 가거도 등 5개 시·군 25개 국토외곽 먼섬의 지역 활력 제고 등 섬 주민이 체감할 정책을 수립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먼섬 특별법은 국토외곽에 위치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생활 기반 시설 정비와 확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생활 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전국 43개 먼섬 중 전남은 25개 섬이 포함돼 있

다. 시·군별로 여수 3곳, 영광 4곳, 완도 1곳, 진도 6곳, 신안 11곳이다.

전남도는 특별법에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발전 5개년 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착수, 먼섬 주민 신규 사업과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먼섬 발전 전략별 과제로 ▲먼섬 주민의 생활 안전과 지역 활력 제고 ▲먼섬의 접근성 개선과 이동 기본권 보장 ▲먼섬의 생활인구 유입과 정착 지원 확대 ▲먼섬의 미래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등을 담을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Panasonic

파나소닉 헬스케어 90주년 기념 90th

REAL PRO MAN1

최강 300만원 특별혜택!

파나소닉 헬스케어 90주년 기념

최강 300만원 특별혜택!

- 행사기간 : 2024.12.20 ~ 2025.01.31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선택해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파나소닉 헬스케어 90주년 기념 최강 혜택 행사를 진행합니다.

최고사양 REAL PRO MAN1 최강 300만원 혜택 + 안심보장 4년 무상 AS서비스

연말연시를 맞아 소중한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